

■ 20년 9개월만에 풀려

KAL기 폭파사건 계기 88년 1월 지정

日 납치사건·적군과 보호 등 이유 삭제 보류 美, 핵불능화 연계 우여곡절 끝 해제 발표

미국이 11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은 지 꼭 20년 9개월만에 해제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1987년 12월 김현희 등 북한 공작원들에 의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국무부는 지난 4월30일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조치에서 벗어나려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그동안 수없이 요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해제 가능성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2000년 들어 해제 가능성이 대두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후 13년여 동안 주목할만한 테러지원 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1996년 3월 이스라엘 폭탄 테러 사건과 1998년 8월 탄자니아와 케냐 주재 미국대사관 폭탄테러가 각각 발생했을 때 외교부(현 외무성) 대변인이 테러를 반대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는 성의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0년 3월 북미 테러전문가 회담이 열린 것도 정상 참작의 중요한 이유로 지적됐다. 하지만 미국은 그 이후에도 북한

에 대해 KAL기 폭파와 일본인 납치사건, 적군과 보호 등을 이유로 번번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보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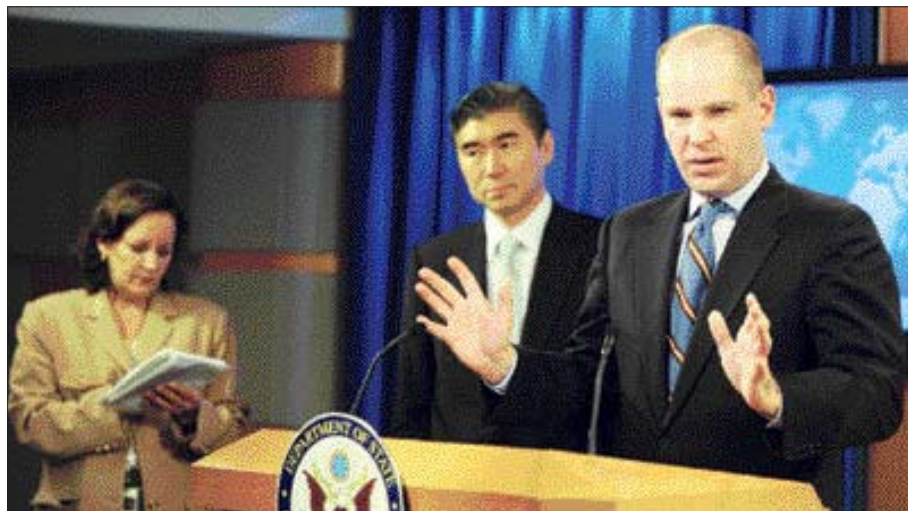
하지만 올 들어 어느 해보다 연내 테러지원국 지정 삭제 가능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삭제하는 조치를 북한의 비핵화, 다시 말해 2·13 합의에 따른 '안전하고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와 연계시켰기 때문이다. 동시에 테러지원국 지정 삭제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또 작년 보고서에서 나온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보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용의가 더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26일 북한이 핵신고 약속을 뒤늦게나마 이행하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을 앞으로 45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혀 테러지원국 해제가 한때 기정 사실화되기도 했다.

이로인해 해제조치가 이르면 지난 8월11일을 전후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한때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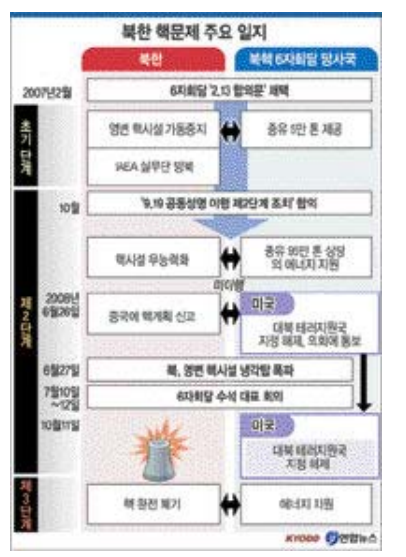


미 국무부의 선 매킨 맥 대변인이 11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 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세를 이뤘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검증에 대한 협력을 문제 삼아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예정대로 취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검증팀에게 봉인 제거와 퇴거 요구를 하는 등 다시 강경 대응을 선언, 테러지원국 해제가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급거 북한을 방문해 핵검증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우여곡절 거친 끝에 예상됐던 해제 일보다 꼭 2개월이 지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뤄지게 됐다. /연합뉴스



경험 개선 효과 기대

개성공단 등 설비 반출 쉬워질 듯

■ 남북관계 영향은

미국이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일단 북·미 관계 개선의 발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단장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 수순에 들었다는 점에서 비핵화를 사실상 관계 개선의 전제로 삼아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정책을 수행할 입지가 넓어진 것이지만 북한에는 오히려 대남 압박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테러지원국 해제 자체만으로도 남북 경험 여건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의 완화로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의 설비 반출이 종전보다는 쉬워질 것이라 게 그 근거다.

더 나아가 테러지원국 해제는 사실상 핵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로 구성된 비핵화 2단계의 마무리, 즉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의미하는 만큼 남북관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 정부

에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좋은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대북 구상인 비핵·개방 3000의 본질이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기에 테러지원국 해제 후 북한의 핵불능화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경협 인프라 구축에 적극성을 펼 공간이 큰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맞장구'를 칠지 여전한 문제로 남는다. 북한이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대미, 대남 관계를 동시에 활성화해서 살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다면 남북관계는 양측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보이는 태도로 미뤄 대미 관계 진전 노력과는 별개로 남북과는 계속 각을 세우려 할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달 한때 대남 비난을 줄였던 북한이 최근 비난의 빈도와 수위를 모두 높이고 있는 점, 강경 메시지를 담은 해군 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점, 배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 및 개성관광에 악영향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조짐이었는데 이견이 없다. /연합뉴스

美, 부시 임기내 핵불능화 되살리기 北, 국제 금융기관 자금 사용 용이

■ 美·北 득실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북한이 핵불능화에 복귀하는 내용의 북미 핵검증 합의에서 양측이 얻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

북한은 애초 비핵화 2단계인 핵불능화 과정을 이행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은 굳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데버리지'가 되는 테러지원국 해제카드를 포기할 필요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미국=조지 부시 행정부는 내년 1월로 끝나는 임기내에 북한의 핵불능화라는 2단계 목표달성의 동력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이번 핵검증 합의를 '나쁘지 않은' 딜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차기 대통령 선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이라도 일단 불능화의 관이 깨지는 일은 피해야 했던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구색을 모든 갖춘 핵검증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논리에서다.

일단 6자회담 프로세스가 다소 불완전한 합의 속에서도 굴러갈 수만 있다면 비핵화 3단계의 바통을 차기 정권에 넘겨주는 릴레이 주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북한=특유의 비관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단계를 잘게 쪼개서 이익을 추구하는 전술)을 동원해 자신들이 목표했던 최대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의 실행 가능성 여부를 보였을 때 돈 오버더포 교수(조지타운대) 같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아마도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협상전략일 것"이라고 북한의 속내를 읽어냈다.

북한은 이렇듯 의도가 뻔하게 읽히는 카드를 갖고도 핵도박의 판돈을 키워서 최대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20년9개월만에 오명을 벗는다는 상징적 의미 하나만으로도 북한에는 남는 장사라는 예기다. 또한 당장은 아니겠지만 북한이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끌어다 쓰려고 할 때 거주장소라했던 딱지 하나를 제거한 효과도 얻어냈다. /연합뉴스

이달 내 6자회담 개최 전망

경제·에너지 지원 日 참여 변수

북한과 미국이 검증의정서에 합의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에 따라 위기에 몰렸던 북미 6자회담도 정상 궤도에 복귀하게 됐다.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에 따라 중단됐던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재개하고 한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은 북한의 불능화에 상응해 제공하기로 한 중유 95만t에 상응한 경제·에너지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조만간 북·미 간에 합의된 검증의정서를 추진하기 위한 6자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선(11월4일)을 감안하면 개최 시기는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

론이다.

성 김 미 국무부 북핵특사도 11일(현지시간) 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6자회담 개최를) 얘기해 왔고, 중국측은 검증 패키지를 채택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그것도 이달안에 회의를 소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개최될 6자회담의 주 의제는 검

증의정서 채택이 되겠지만 북한의 불능화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마무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불능화 11개 조치중 8개를 완료해 남은 조치는 폐연료봉 인출,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미사용연료봉 처리 등 3가지다. 이 중 폐연료봉은 총 8천개 중 4천700

여개를 꺼낸 상태다.

미사용연료봉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매입하거나 못쓰게 구부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약속된 중유 95만t 중 현재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44만6천t에 해당하는 지원이 이뤄진 대북 경제·에너지 제공에 대해서는 일본의 참여가 여전히 변수다. 일본은 자국 납치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가 채택됐지만 실제 검증활동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야 하는 등 작음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이나 가능할 것이라 관측이 많다. /연합뉴스

무안 - 광주(황산, 구화산)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무안 - 장사(장가계, 원가계)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 개인 차에의 만족도를 주는 광주MBC 문화방송 상품입니다(www.kjmbc.co.kr)
 * 기존의 예치 상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무안-광주 직항 전세기	무안-장사 직항 전세기
<p>무안-광주 직항 전세기 (4인실) 1박 2일 ₩ 243,000 / 4인실 5일 ₩ 789,000</p> <p>무안-장사 직항 전세기 (4인실) 1박 2일 ₩ 243,000 / 4인실 5일 ₩ 789,000</p>	<p>무안-장사 직항 전세기 (4인실) 1박 2일 ₩ 243,000 / 4인실 5일 ₩ 789,000</p> <p>무안-장사 직항 전세기 (4인실) 1박 2일 ₩ 243,000 / 4인실 5일 ₩ 789,000</p>

다들 여기까지 검색하셨습니까? **광주MBC 문화방송** - **광주MBC 문화방송** - **광주MBC 문화방송**

광주MBC 문화방송 광주/전남 북 유영이행사 ☎ 문의 062-226-6070